

〈과학계 - 산업계 릴레이대담〉

위기의 과학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글 | 김현_ 본지 기자 hkim@kofst.or.kr 사진 | 동아일보사

과학교육이 위기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는데 고등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은 늘어났다. 학생들은 고교 전체 교과목 78개 가운데 2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꼭 배워야 하지만, 점수 따기는 어려운’ 기초 과학이 학생들로부터 홀대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문제의 진양지는 교육부가 지난 1997년 확정해 2000년부터 적용해 온 7차 교육과정 개편안. 교육부는 당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자율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교과목 선택을 ‘학생 자율’에 대폭 맡겼다.

“과학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한 걸음 더 나가, 교육부는 7차 이후 교육 과정 개편은 차수를 더 하지 않고 ‘수시’ 개편의 형식을 띠게 했다. 여기에는 7차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 2월 26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7차(수시)’ 교육과정 개편 안에도 이 같은 의지는 그대로 이어졌다. 이번 개편에서 교육부는 기존 5개 과목군(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 가운데 예체능을 ‘음악·미술’과 ‘체육’으로 나뉘 모두 6개 과목군으로 늘렸다.

‘과학기술’ 과목군을 ‘수학’ ‘과학’ ‘기술·가정’의 독립 과목군으로 설정하라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이 같은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재난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동아일보가 ‘과학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산업계-과학계 인사들의 릴레이 대담을 공동 기

획한 배경에는 이 같은 절박함이 배어 있다.

4차례 대담에 등장한 8인의 인사들은 대학 연구실의 인력 부족부터 교육의 하향 평준화,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홀대, 과학기술에 전폭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와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당초 이 시리즈는 그 첫회에 해당하는 ‘채영복 과총 회장-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담만 단발성 기사로 기획됐으나, 두 사람의 대담이 보도된 뒤 각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자, 이후 3회에 걸친 ‘산업계-과학계’ 인사들의 릴레이 대담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과총의 공동기획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대담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신는다.



“대학원 연구인력 모자라 베트남서 데려오는 현실”

◇ 대담일 : 2007. 2. 6(화)

◇ 장 소 :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0층 회의실



“미적분을 모르는 사람이
이공계 대학에 들어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인문계 출신 기업 CEO도
과학적 소양이 없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 **채영복 회장** : 전체 학생의 40%가 이공계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사람은 부족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고 이공계 대학에 오거나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전혀 배우지 않고도 화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별도반을 편성해 기초 학업을 보충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더 심각합니다. 과학 기초가 없는 학생이 대학원에 가겠습니까. 대학원 연구실에 인력이 부족해 교수들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가 선물 공세를 퍼면서 학생을 데려와야 하는 실정이에요.

◇ **윤종용 부회장** : 전자 전기 기계 등 공학 분야에서는 고도의 미적분이 필수입니다. 이를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오면 기초를 배우느라 4년을 허비하게 돼요. 기초를 쌓지 않으면 대학과 산업계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교육은 산업 발전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이는 곧 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 **채 회장** :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 등 각종 학생들의 학력 테스트에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우수해요. 그러나 교과목 편식 현상이 나타나는 고등학교에선 상황이 바뀝니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물리Ⅱ로 시험을 친 학생은 전체의 3.3%에 그칠 정도니까요. 물론 소수의 엘리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질이 저하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문계 학생에게도 기본적인 과학 소양을 길러 줘야 해요.

◇ **윤 부회장** : 디지털 시대의 화두인 ‘컨버전스’가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의사도 영상기기를 보고 진단하며 비디오 아트 같은 예술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을 이끄는 사람은 기술 변화를 이해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인문계 출신도 기본적인 과학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형도 모르고 지도도 못 읽는 사람을 전쟁터에 지휘관으로 내보내는 격입니다.

◇ **채 회장** : 과학은 하루 이를 공부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은 기초를 다지 못해 결국은 관심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충분히 받게 한 뒤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선택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윤 부회장** : 교육인적자원부 방침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은 학생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는 좀 달라야 합니다. 이공계 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좀 더 심화된 수학과 과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공계 대학에서 필요한 소양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 **채 회장** : 대학은 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



▲ 윤중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과학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러나 대학들은 시험을 어렵게 하면 응시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합니

다. 그래서 시험을 좀 더 쉽게 냈더니 이번에는 학생이 늘었지만 과학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 개혁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도 학생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능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안 뽑는다는 기준 같은 게 필요합니다.

◇ **윤 부회장** : 교육부는 현행 수능을 통해 충분히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 수준을 맞추려면 이와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도 세분해야 합니다. 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낮추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실기와 비슷한 전형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2] 이장무 서울대 총장 - 이구택 포스코 회장

“기업-대학간 융합만이 살길 ... 소통과 실천 중요”

- ◇ 주 제 : “과학계와 산업계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 ◇ 대담일 : 2007. 2. 15(목)
- ◇ 장 소 :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기업, 인재 키우는 프로슈머 돼야”

(이장무 서울대 총장)

◇ **이장무 총장** : 대학과 기업의 눈높이가 서로 달랐습니다. 과거엔 대학의 연구 개발 방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맞춰져 있었어요. 반면 산업계는 선진국을 추격할 기술을 대학에 요구해 왔습니다.

◇ **이구택 회장** : 본격적인 산학협력이 이뤄진 것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 상대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등 혼자 힘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또 대학이 교수를 평가할 때 특히 출원 건수나 산학협력 건수를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SCI에 실릴 기초과학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교수평가 때 産學 기여도 반영을”

(이구택 포스코 회장)

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이 총장** : 대학이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문 중심,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학의 이론 중심 연구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대학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학협력에 대한 기여도가 교수 평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 회장** : 산학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기업 탓도 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오른쪽)과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소 무한 기술경쟁 시대를 맞아 대학과 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상생' 뿐이라고 강조해 온 두 사람은 이날도 산학협력을 위한 '만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포스코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수가 단기가 아니라 3년 동안 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첨단연구도 좋지만 기업과 산업의 성숙도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강 분야에서도 첨단 연구라고 해서 모두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의 연구 지원이 나노, 바이오, 정보기술 등 유행을 좇는 율림현상이 있는데 이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이 총장** :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2.1%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진학률 51%에 비해 꽤 높은 수치입니다. 대학이 질적 발전보다 양적 팽창에 치중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산업체도 이제 더는 고급 인력의 수요자가 아닌, 생산자와 수요자의 역할을 모두 하는 '프로슈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인력을 뽑고 양성하려면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3%에 불과한 고등교육 투자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 **이 회장** :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문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원 교육은 기업의 몫입니다. 문제는 영어나 컴퓨터 등 기본소양도 가르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대학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주입식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의 상실을 불러옵니다. 또 대학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논문 주제를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의해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이 나오면 취

업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이 총장** : (공부 잘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의학 치의학 법학 분야로 빠져 나가는 현상도)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학 역시 범이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도 의사 중심에서 최신 의료기술로 중심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학과 이공계 소양이 필수인 지적 재산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공계 출신자들이 여러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출신이 불안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공계 취업률은 76.5%로 66.4%인 인문사회계 보다 높습니다. 첨단 대기업에서 이공계 CEO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공계 미래는 한마디로 밝습니다.

◇ **이 회장** : 일본의 전통 제조업이 강한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만드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사회가 제조업을 주목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앞으로 살 길은 기술밖에 없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급격한 속도로 벤치마킹, 베끼기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없이 베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 **이 총장** : 서울대에서는 내년 2월 융합기술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간공학 나노과학 등 통합학문과 산학협동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 회장** : 포스코에서도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나 환경 등 더 넓은 영역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포스코는 2005년 9월 포스텍(포항공대)에 철강전문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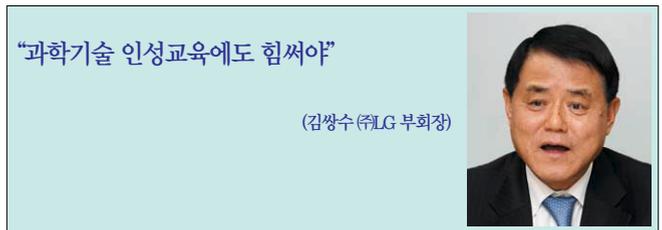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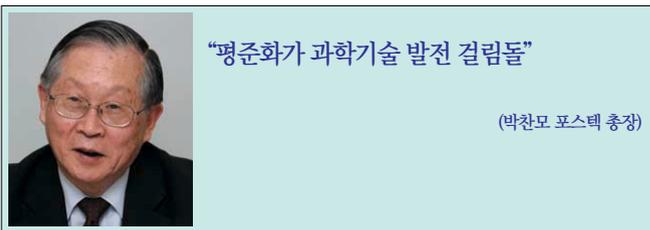
◇ **이 총장** : 그런 시도가 바로 프로슈머로서의 기업 모습이라고 봅니다.

◇ **이 회장** : 요즘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짜 맞춤형 인재를 길러 주겠다는 대학도 늘었습니다. 기업도 끊임없이 사원을 교육하죠. 기업 교육을 대학과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3] 박찬모 포스텍 총장 - 김쌍수 (주)LG 부회장

“中, 과학기술에 무섭게 투자 ... 손놓고 있다간 곧 따라잡혀”

- ◇ 주 제 : ‘한국 과학기술 정책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
- ◇ 대담일 : 2007. 2 21(수)
- ◇ 장 소 : 서울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4층 회의실



◇ **박찬모 총장** : 한국 과학기술정책이 꽃피었을 때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다고 봅니다. 그 때는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 주고 정책도 많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부가 과학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지요. 과학기술자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 **김쌍수 부회장**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나 국가 정책이나 평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은 평준화로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 **박 총장** : 하향 평준화라서 더 문제죠. ‘두뇌한국(BK)21’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나뉘먹기’ 식 때문입니다. 중국에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중국의 정보기술(IT) 분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학 발전과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칭화대와 베이징대 등 30여 개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아는 겁니다.

◇ **김 부회장** : 정부가 과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깃발을 흔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 지도자가 자주 과학기술 현장을 방문해 어깨를 두드려 줘야 사기가 올라갑니다. 한국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많지만 그 수에 비해 성과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 **박 총장** :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과학기술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은 요직의 90% 정도를 이공계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 부회장** : 1970~80년대 초반 해도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학했습니다. 그 때 그 출신들이 산업을 이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의 풍조는 기업에서 기술자를 하면 ‘지방에서 죽도록 고생만 한다’는 좋지 않은 인식이 많습니다. 국책은행 직원들 연봉이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연봉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걸 학생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자가 기술고시 출신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기술고시가 맥을 못 춥니다.

◇ **김 부회장** :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 보면 연예인 된다는 아이는 많아요. 과학자가 되겠다는 아이는 거의 없네요. 제 어릴 때는 과학자가 장래 희망인 애가 많았습니까. 교육과정을 과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런 자질을 갖춘 교사를 특별 대우해야 합니다.

◇ **박 총장** : 맞습니다. 상당수 교사 자신이 과학을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활과학 교실 같은 것을 열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보여 주고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할 텐데 관심이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총장** : 과학기술계 출신이 기업에 들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인성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특히 표절 등 윤리도덕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IT 강국' 이라고 하는데 윤리가 뒷받침되

지 못해 벌써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IT 망국' 이 돼 가는 느낌입니다.

◇ **김 부회장** : 자기밖에 모르고 포용력이 없는 과학자가 되지 않도록 인성교육도 꼭 필요해요. 한 명의 천재는 있으면 좋지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집단에서의 천재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말이죠. 특히 일본에 이런 '집단 천재' 가 많습니다.

[4]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20, 30대에도 노벨상 업적 … 한국선 취직 걱정할 나이”

- ◇ 주 제 : 세계적 과학인력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 일 시 : 2007. 2. 26(월)
- ◇ 장 소 : 서울 중구 신라호텔 콘퍼런스룸



“위험 두려워 말고 인재에 투자할”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 **서남표 총장** : 한국은 어린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너무 들볶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을 자율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정부는 교육 목표만 세우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교육계에 자율권을 줘야 해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자꾸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오른 논문 수 같은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질의 논문이 잘 안 나오고 논문 편수는 적지만 잠재력이 많은 20, 30대 젊은 연구자들을 키워 내지 못하게 됩니다. DNA 이중 나선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잡슨과 크릭도 당시 나이가 20, 30대였죠. 아마 한국 같았으면



“중국은 미국서 인력 초빙해 큰 성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이들은 취직도 못했을 겁니다.

◇ **김신배 사장** : 교육 방법도 시장경제 원리처럼 경쟁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군요. 저도 동감입니다.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점수 위주의 평가로 학생들을 관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가 메뉴(학과목)를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될 겁니다. 각자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규격화된 인재 양성 시스템, 평준화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 **서 총장** :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정부, 학교, 기업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20년 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조 원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합니다.

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국방, 우주, 생명 분야처럼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지원 방식도 정보기술, 바이오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당 연구자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성공한 나라가 있고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잘 분석해 투자 대비 성과를 고려해 과학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김 사장 : 중국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연구 실적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유치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시분할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TDSCDMA) 등 중국의 기술 구축 사례를 볼 때마다 좋은 인재를 많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 서 총장 : (이공계 기피현상은) 부모나 학생이나 외환위기 때 엔지니어들이 직장에서 대거 나갔던 경험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파트는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니 승진도 한계가 있고, 같은 경력의 다른 직종에 비해 연봉이 낮으니 인기가 없을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의대를 가는 학생이 많아지면 10년 뒤엔 공급이 넘쳐 의대의 인기가 떨어질 겁니다. 다만 이공계 출신의 처우와 환경이 현재보다 월등히 개선돼야 합니다. '20년 뒤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 김 사장 : 많은 회사가 기술 혁신을 부르짖는데도 기업들이 이공계 채용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곰곰이 따져 봐야 해요. 이는 이공계의 학문적 특성이나 기업의 채용 기피라는 현상에서 나온 문제만은 아닙니다. 먼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도 향후 우리 기업들에 먹을거리를 제공할 성장 동력인 만큼 학문적 지식 외에도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신입사원 가운데 50%가 이공계 전공자입니다. 연구자가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 서 총장 : 미국과 독일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 형편이 좋을수록 탄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과학기술계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나 대학, 기업에서 처우를 잘해 주어야겠지요. ㉔

